

탈근대 대안적 정치공간의 양상과 특징 : 스케일, 경계, 원리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이상봉**

•요약•

근대 국민국가는 ‘영역성’을 그 기반으로 삼아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 국가를 단위로 삼아 제도화된 ‘근대성’은 이성적 합리주의와 인간의 진보를 가치로 내걸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나, 후기에 접어들면서 당초의 기도(企圖)와는 달리 비인격화, 도구화, 권력화 등의 부작용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다양한 탈(post)근대적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 글은 근대성의 대표적 표상인 국민 국가가 영역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탈(post)근대적 변화를 공간정치의 관점, 즉 국민국가가 영역성의 약화 및 재구성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대안적’ 정치공간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국가 영역성을 스케일, 경계, 원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특징짓고,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변용 또는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대안적 정치공간의 양상과 그 의미를 그려내고자 한다. 스케일의 측면에서는 공간의 중층·다원화와 장소의 공간의 가능성을 다루고, 경계의 측면에서는 국민국가의 탈영역화 및 재영역화와 시티즌십의 다원화를 살펴보며, 원리의 측면에서는 ‘구조’에서 ‘네트워크로’의 변화와 ‘통치’에서 ‘협치’로의 전환을 고찰한다.

주제어 : 국민국가, 공간정치, 영역성, 스케일, 대안

I. 시작하면서

근대 국민국가(nation state)는 ‘영역성(territoriality)’을 그 기반으로 삼아 성립되었다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연구활성화 지원사업(2023)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교수

고 할 수 있다. 즉, 근대국가는 배타적인 ‘영토(territory)’를 기반으로, 마찬가지로 배타적인 국민과 주권을 3대 요소로 하여 구성된다.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는 다른 국가가 있을 수 없으며, 또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하나의 국가에만 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영역성은 ‘스케일’, ‘경계’ 그리고 운영 ‘원리’의 측면에서, 근대 이전의 정치공동체와 확연히 구별된다. 즉, 국민국가는 생활권의 훨씬 넘어서는 광대한 스케일을 가진 추상적 정치공동체였으며, 국경을 의미하는 경계(border)는 대내적 동질성과 대외적 배타성을 구획하는 수단이었고, 운영 원리의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시스템(system)’을 통해 통합·관리될 수 있었다.

전 세계가 이러한 배타적 경계를 가진 국민국가들로 채워지는, 이른바 ‘국민국가체제’가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과학기술 발전의 덕분이었다. 즉, 광대한 공간을 동질적인 정치공동체로 묶어내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라디오를 비롯한 미디어와 철도를 비롯한 교통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민국가는 그 영역성을 형성·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후기근대에 접어들면서 국민국가의 영역성은 도전에 직면하여 크게 약화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글로컬화(glocalization)로 불리는, 국민국가의 영역 외부와 내부에서 공간구성의 변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용이 초래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배경에 IT기술을 비롯한 모빌리티(mobility)의 획기적 발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역설적이게도, 국민국가 스케일로의 공간의 통합·확장을 가능케 하여 국민국가 등장의 산파 역할을 했던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번에는 국민국가 영역성을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주된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영역성에 기반 한 국민국가를 단위로 삼아 제도화된 근대성(modernity)은 이성적 합리주의와 인간의 진보를 기치로 내걸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나, 후기에 접어들면서 당초의 기도(企圖)와는 달리 비인격화, 도구화, 권력화 등의 부작용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다양한 탈(post) 또는 후기(post)근대적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 글은 근대성의 대표적 표상인 국민국가가 영역성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탈 또는 후기 근대적 변화를 공간정치의 관점, 즉 국민국가 영역성의 약화 및 재구성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대안적’ 정치공간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국가 영역성을 스케일, 경계, 원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특징 짓고,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변용 또는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대안적 정치공간의 양상과 그 의미를 그려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분출하고 있는 다양한 탈 또는 후기 근대적 현상들은 대체로 시-공간

적 인식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화는 공간인식 및 구성의 변화와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시간 중심의 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오던 공간에 주목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른바 ‘공간적 전환(spacial turn)’이 사회이론 분야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공간(성)’이 사회관계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화정치’, ‘공간정치’, ‘스케일의 정치’, ‘장소의 정치’ 등 공간과 정치를 결합한 다양한 개념과 키워드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간적 전환 이후 이른바 공간담론(space discourse)이 지리학, 사회학 등을 중심으로 봄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정치’현상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 정치학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 이런 점에서,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모색되는 탈근대적 대안들의 양상과 특징을 공간정치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이 글은 정치학분야에서 공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촉구하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II. 스케일의 재구성

1. 공간의 중층·다원화

근대성의 대표적 표상인 국민국가는, 캙(R. D. Sack)이 “특정 지역(area)을 통제함으로써 자원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관리하는 공간적 전략”으로 정의한 바 있는,¹⁾ ‘영역성(territoriality)’을 그 토대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 근대성에서 탈근대성으로의 전환 또는 이행은 그러한 영역성의 ‘위기’에 기인하며, 새로운 탈근대적 공간구성의 내용이나 특징은 영역성의 변화 양상이 어떤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의 영역성을 세계적 공간구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체세계는 대내적 동질성과 대외적 배타성을 가진 주권국가들 간의 관계, 즉 국제(inter-national)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인 주권국가는 독보적인 정치의 주체이자 단위(unit)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역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스케일(scale)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국가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던 전근대적 정치공동체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추상적이고 광대한 정치공동체이자, 세계를 나누는 분절적·배타적 공간단위라고 할 수 있다. 알다시피,

1) Robert David Sack,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1.

국민국가라는 추상적이고 광대한 규모로 공간적 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확장된 시장을 원했던 자본의 욕망과 이를 추동하는 기술적 발전, 즉 철도로 상징되는 교통수단 및 라디오로 대표되는 미디어 기술 등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국민 국가 스케일의 공간통합을 가능하게 했던 자본의 욕망과 기술의 발전은, 후기근대로 접 어들면서 이번에는 국민국가 중심의 공간구성의 변용을 가져오는 이유가 된다. 즉, 국민 국가를 넘어 글로벌 스케일에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본의 욕망과 경계를 무력화하는 모빌리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공간구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국민국가 스케일의 공간구성에 도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글로벌화(globalization)라 할 수 있다. 글로벌화는 마치 과거 국민국가가 전통적 정치공동체를 해체·확장·통합 하여 스케일을 재구성하던 방식으로, 이번에는 보다 확장된 글로벌 스케일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다. 글로벌화 현상은 매우 복합적이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공간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공간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논의가 수렴된다. 즉, 헬드(D. Held)가 잘 정리한 바와 같이, 글로벌화를 둘러싼 초기 논쟁들은 이것이 국민국가의 약화나 해체를 초래할지, 아니면 유지·강화할지, 그것도 아니면 재구성(:변환)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점차 글로벌화를 국민국가의 해체나 강화가 아닌 공간의 재구성으로 보는 로즈노(J. Rosenau)나 기든즈(A. Giddens) 등 이른바 ‘변환론자들(transformationalists)’의 해석이 힘을 얻게 되었다.²⁾ 이들 변환론자들은 글로벌화가 국민국가에 미칠 긍정적(:강화), 부정적(:해체) 영향의 단순한 전망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위상과 기능의 변화를 포함한 공간질서의 재구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글로벌화를 공간구성의 층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이는 로컬(local)-내셔널(national)-리저널(regional)-글로벌(global)로 이어지는 공간 층위의 가장 확장된 한쪽 끝이며, 다른 한쪽 끝에는 로컬이라는 대비되는 층위가 존재한다. 글로벌화로 인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사회관계나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국가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이는 국가의 영역내부에 대한 장악력 약화로 이어져, 그동안 위계적 질서의 하부에 위치하던 로컬들에도 권한을 넘겨주게 된다. 글로벌화가 로컬화를 촉진하고, 다시 로컬화는 글로벌화를 심화시키는 동시진행의 과정인, 이른바 글로컬화(Glocalization)가 전개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글로벌과 로컬의 이러한 연쇄가 중층적 공간들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즉, 글로컬화에 따라 국민국가의 정치공간은 이제 로컬, 내셔널, 리저널, 글로벌

2) 데이비드 헬드·엔소니 맥그루·데이비드 골드브라트 지음, 조효제 옮김, 『전지구적 변환』, 서울: 창비, 2002, pp.17~28.

총위의 공간들이 중층·다원적으로 겹치는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컬화에 따라 공간구성의 중층·다원화가 진행된다는 의미는 기존의 국민국가 정치공간이 초국가 혹은 국가하위 단위의 정치공간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민국가가 유력한 정치공간의 단위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베타적 정치공간으로 존재할 수는 없으며, 초국가 및 국가하위 단위의 정치공간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이른바 ‘공간의 재영역화’를 통해서만 그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베타적 국가주권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 없어지거나 크게 준 것만은 아니다. 여전히 안보, 복지, 경제, 고용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고 있으며, 어떤 스케일의 공간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가는 각 스케일의 공간이 가진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테일러(Taylor, P. J.)가 “글로벌한 것은 실재적(real)이고, 국민국가는 이념적(ideological)이며, 로컬은 경험적(experienced) 스케일”이라고 구분한 것처럼,³⁾ 글로벌 층위는 경제나 환경, 국가적 층위는 정치나 군사, 로컬 층위는 문화나 일상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는 방식으로, 공간의 중층·다원화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재영역화의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 크게 부각된 공간이 로컬스케일에 해당하는 ‘도시’이다. 즉, 1990년대 이후 사센(S. Sassen)의 *The Global City*⁴⁾를 필두로 도시이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공간 재영역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세계는 국가 간의 관계, 즉 ‘국제(inter-national)’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들의 네트워크로 재구성된다. 세계금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글로벌 금융도시,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글로벌 해항도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생산거점도시를 비롯해, 관광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등과 같이 각 로컬의 특성을 살린 도시공간들이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컬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영역적으로 국가에 베타적으로 귀속되던 것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고 있는 로컬에 속하면서 동시에 세계시민(cosmopolitan)의 정체성 또한 가지게 되었다. 하비(D. Harvey)의 지적처럼, “나(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공간에 소속되어 있는가? 세계시민인가, 국민인가, 로컬인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⁵⁾ 어떤 때, 어떤 상황, 어떤 분야인가에 따라 국민이기도, 로컬주민이기도 세계시민이

3) P. J. Taylor, "A Materialist framework for political geography",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 vol 7, no.1, 1982, pp.15~34.

4) Saskia Sassen, *The Global City*, New Y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5) D. Harvey, *Justice, Nature & the Geography of Difference*,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1996. p.246.

기도 한 것이 아닐까?

공간 스케일의 중층·다원화는 이른바 ‘스케일의 정치(politics of scale)’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정치는 국가스케일이라는 항상 같은 스케일을 기반으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집-커뮤니티-로컬-내셔널-리저널-글로벌로 이어지는 중층적 스케일에서 각각 그리고 서로 다른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된다는 것이다.⁶⁾ ‘스케일의 정치’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스케일 점핑’에 있다. 이는 하나의 스케일에서 확립된 정치적 요구나 권력이 다른 스케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로컬에서 발생한 정치적 문제는 다른 로컬이나 확장된 스케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층적 스케일의 관점이나 확장된 스케일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컬의 정치가 당면한 문제들은 때때로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연대나 협력을 통해 더 잘 해결될 수 있게 된다.

2. 글로벌한 유동의 공간 vs. 로컬한 장소의 공간

국민국가를 초월하는 확장된 스케일의 이른바 ‘글로벌공간’을 만들어내는 주된 동력은 ‘자본’과 ‘권력’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경을 넘어 이윤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자본의 무역·투자활동이나 국제노동력의 유동화가 글로벌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힘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권력인 것이다. 이들 신자유주의적 자본과 권력은 이전에 국민국가가 다양한 로컬들을 유린·통합하며 국가스케일로 공간을 확장·연장하던 방식으로, 이번에는 국민국가를 초월하여 글로벌스케일로 공간을 확장·연장한다. 기든스(A. Giddens)의 표현대로, 글로벌화는 공간과 시간을 점진적으로 연장·발전시켜 가는 하나의 ‘연장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⁷⁾ 근대화가 진행될 당시 라디오와 기차로 대표되던 미디어 및 모빌리티 기술이 국가공간이라는 추상적·동질적 스케일의 공간 창출을 가능하게 했다면, 항공기와 모바일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은 자본의 이익에 추종하는 글로벌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자본과 권력의 글로벌한 흐름이 만들어내는 이른바 ‘유동의 공간’은 특유한 시간–공간적 변화를 초래한다. 하비(D. Harvey)는 이를 ‘시–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으로 표현한 바 있다.⁸⁾ 즉,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거리는 줄어들고, 사회·제

6) N. Smith, “Scale”, Ronald J. Johnston, Derek Gregory, Geraldine Pratt & michael Watts(eds.)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4th Edition*, Massachusetts: Blackwell, 2000, p.724.

7) A. Giddens, *Konsequenzen der Modern*, frankfurt: M, 1995. p.85.

8) 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 of Cultural Change*, Cambridge

도적 거리 또한 세계 공통의 규범(:위성턴 컨센서스)이 국경을 초월한 동질적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시-공간이 극도로 압축된다. 글로벌화에 따른 이러한 시-공간의 압축은 자본의 흐름(:회전속도)이 공간변용의 속도를 훨씬 앞질러 세계 공간의 의미를 바꾸어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자본과 권력은 흐름을 통해 글로벌한 공간을 지배하며, 유동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어리(J. Urry)는 이러한 양상을 ‘영역’과 대비되는 ‘유동’의 메타포를 통해 설명한다.⁹⁾ 즉, 그는 글로벌화를 글로벌한 문화나 경제의 흐름이 국민국가라는 경계가 낮아진 ‘영역’을 석권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 급격한 모빌리티의 발전으로 인해 자본·사람·물자·이미지가 순간적으로 흐르며 영역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한 ‘유동의 공간’의 기저를 관통하는 것은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을 지도하는 ‘자본의 원리’이며, 또한 그것을 지탱하는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다.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영역’과 달리 유동의 공간은 균질하지 못하고 단절적이며, 고도의 혼종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같은 ‘영역’의 메타포에서 ‘유동’의 메타포로의 전환은 ‘구조’의 메타포에서 ‘네트워크’의 메타포로의 전환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유동, 즉 흐름은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글로벌한 흐름의 네트워크에서는 로컬, 즉 도시가 그 결절점이 된다는 점이다.

초국가적인 자본과 권력은 유동의 공간을 통해 세계 각 지역의 로컬들을 자본의 구미에 맞게 유린·개발하고,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재조직한다. 즉, 자본의 조직과 흐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허브도시, 비행기를 통한 사람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주요 세계도시들을 연결하는 허브공항도시, 글로벌 스케일의 생산-유통-소비의 흐름에서 각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도시, 물류도시, 소비도시, 관광도시, 문화도시 등의 형태로, 세계의 각 로컬들은 해당 국민국가의 경계를 수월하게 넘나들며 새롭게 글로벌한 공간 속에 배치되는 것이다.

자본과 권력이 만들어내는 유동의 공간이 전 세계의 로컬들을 장악해 가는 글로벌화라고 한다면, 이는 과거 로컬의 경계를 넘어 국민국가스케일로 확장되었던 근대적 공간이, 탈근대에 접어들어 이제 자신(: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스케일로 다시 확장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대성의 ‘연장과정’으로 볼 수 있다. 탈근대의 새로운 공간구성을 근대성의 ‘연장’ 또는 ‘확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화는 자본의 구미에 맞게 전 세계의 로컬들을 유린·개발하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MA: Blackwell, 1989. p.260.

9) J. Urry, *Global Complexity*, Malden Mass.: Polity Press, 2003, p.44.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화가 진전할수록 로컬화가 심화되는 식으로, 양자는 상호침투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성에 대한 성찰적 논의를 바탕으로, 로컬화를 자본 중심의 글로벌화에 대항하는 의미로 파악하려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화에 따른 공간구성의 변화를 글로벌한 ‘유동의 공간’과 로컬한 ‘장소의 공간’의 대치로 파악하는 카스텔(M. Castells)은 대항 글로벌화의 대표적인 논자이다.¹⁰⁾ 그는, 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한 유동의 공간이, 한편으로는 로컬한 장소의 공간들이 가진 개성을 없애고 획일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장소가 가진 차이를 상품화하여 소비하는 방식으로, 로컬한 장소의 공간이 가진 의미를 대체해 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그러한 유동의 공간의 우위와 이에 대한 상당한 의존에도 불구하고 삶의 토대로서의 장소의 공간이 가진 의미는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글로벌시대에 생산을 비롯한 경제적 관계는 유동의 공간에 의해 지배되지만, 사회적 재생산을 비롯한 일상의 삶은 여전히 로컬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로컬의 장소를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 일상을 영위하는 경험적 공간으로 파악하여, 이를 유동의 공간이 가진 특성과 논리에 대치시키고 있다.

사람들에게 장소는 일상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곳으로, 권력적이고 배타적인 글로벌화의 와중에 소속감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보호되는 안식처이며, 이러한 외부적 힘에 저항하는 본질적 토대가 된다. 일반적으로 로컬화는 글로벌화의 산물로 이해된다. 로컬의 장소들은 글로벌화를 통해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재생산되는 장소들은 이전의 장소들과는 다르다. 과거 국민국가에 통합되었던 장소들이 ‘뿌리’와 같은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특성을 가졌다면, 새로운 장소들은 상호 연결되는 흐름의 산물로서 개방적이고 관계적으로 재구성된다.¹¹⁾ 글로벌화된 장소들은 주변 장소들보다 세계와 오히려 더 강하게 연결된 일종의 ‘경로’이자 ‘결절’인 것이다.

이처럼 로컬의 장소를 개방적·관계적으로 파악하면, ‘장소의 정치’는 장소나 그 장소에 사는 집단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본질적’ 정치에서 벗어나, 특정 장소에 얹혀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관계적’ 정치로 이행하게 된다. 특히 글로컬화의 맥락에서 보면, 로컬의 장소들은 글로벌한 유동의 공간과 로컬한 장소의 공간이 교차하는 정치적 공간이 된다. 어리가 말했듯이, “장소에서는 매우 두터운 공생적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근접성과 ...거리를 넘어 퍼지는 웹과 네트워크가 연쇄반응을 일으킨다.”¹²⁾

10) M.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6.

11) 팀 크레스웰 지음, 심승희 옮김, 『장소』,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p.74.

12) 존 어리 지음, 윤여일 옮김,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서울: 후마니스트, 2012, p.234.

이러한 이유로 장소는 글로벌한 유동의 공간의 산물이며 그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한 것에 대한 저항의 거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즉, 탈영역화를 주도하는 글로벌한 유동의 공간이 로컬의 장소들을 자본의 구미에 맞춰 유린·소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공간인 장소를 기반으로 이러한 흐름에 대항하는, 이른바 ‘저항적 정체성’이 태동한다.¹³⁾ 글로벌한 자본의 힘에 의해 각 로컬의 차이가 강화·소비되고, 이들에 의한 로컬 쟁탈전이 격화될수록, 이에 대한 저항 또는 방어의 기제로서 로컬리티(: 저항적 정체성) 또한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저항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현실의 사회운동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대안적 글로벌화를 목표로 삼는다. 글로벌화가 태동시킨 로컬화가 다시 글로벌화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로컬에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잘 알려진 슬로건을 “로컬하게 생각하고, 글로벌에서 행동하라(Think Locally, Act Globally)”로 전위(轉位)시키는 것이 바로 대안적 글로벌화라고 할 수 있다.

III. 경계의 재구성

1. 국민국가의 탈영역화와 재영역화

근대 국민국가는 ‘영역성’을 그 공간적 특징으로 하며, 이는 고유한 영역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인 ‘국경’을 통해 작동한다. 즉, 대내적 동질성(:통합)과 대외적 차별성(:배제)을 만들어내는 경계는, 쉽게 넘나들지 못하는 불투과적인 ‘장벽’ 또는 원하는 투과만을 허용하는 일종의 ‘거름망’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국가 영역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과 권력을 추동력으로 삼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모빌리티의 급속한 발전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물자·서비스·정보 등의 이동을 급격히 증대시켰고, 이는 경계의 속성을 바꾸고 나아가 경계의 해체 및 재구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경계의 관점에서 보면, 무경계에서 경계 짓기를 거쳐 경계 해체에 이르는 일련의 전개는 전근대-근대-후기근대로 이어지는 시대 구분에 조응한다고 할 수 있다.¹⁴⁾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물자·서비스·정보의 빈번한 이동은 경계의 속성 변화와 해체를

13) M. Castells, *The Power of Identity*, Malden MA: Blackwell, 1997, p.11.

14) 마르쿠스 슈뢰르 지음,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서울: 에코리브르, 2010, p.332.

초래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때 해체되는 것은 ‘장벽’으로서의 속성을 가진 ‘배타적 경계’이지 경계 그 자체는 아니다. 즉, 경계의 해체는 기존의 ‘장벽’으로서의 경계에서 ‘경로’로서의 경계로 그 속성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경계의 속성이 바뀌면, 영역의 외곽 경계에 해당하는 접경지의 위상도 변화한다. 즉, 중앙집권적인 영역국가의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른바 ‘변경’에 해당하던 접경지는 이제 내-외부의 사람·물자·서비스·정보가 이동하고 다양한 문화가 교섭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교류지대’이자 ‘혼종지역’으로 재인식된다. 고립된 ‘변경’이 횡단과 교섭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혼종이 허용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의 재구성을 앞서 살펴본 공간의 중층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자면, 기존의 ‘국경’이 약화 또는 해체되는 대신에 다양한 스케일의 경계가 새롭게 등장하는 방식으로 경계는 재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경계의 해체가 가진 중요한 함의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물자·서비스·정보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안과 밖의 경계가 불분명한 유동적·혼종적인 공간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영역성에 기반 한 국민국가의 역할과 권한이 분화되어 더 이상 독보적인 정치공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즉, 독점·배타적이었던 국민국가는 이제 로컬 및 글로벌스케일의 다른 공간들과 경합하는 ‘하나의’ 행위주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현실적 측면에서, 국민국가의 배타적 영역성에 가장 큰 도전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주민이라 할 수 있다. 즉,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이주민 수의 급격한 증대와 IT 및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이들의 생활방식 변화는 국민국가 영역성이 가진 한계를 심화·노출시켰다. 배타적 국민국가의 틀로는 더 이상 이들 이주민의 삶을 담아내기가 힘들어 진 것이다. 전 세계에서 매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른 국가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의 이민자들과 달리,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 완전히 이주하는 이른바 ‘정주지향’의 삶이 아니라, 출신지와 거주지 로컬을 오가며 일정한 연계를 지속하는 이른바 ‘유동지향’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IT 및 모빌리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굳이 어느 한쪽을 선택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의해 상시 연결된 복수 지역을 걸치는 삶, 즉 타국에 거주하면서도 모국의 민족문화를 유지하고 모국과의 연계를 지속하는 것이 수월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의 일상적 삶이 견고하던 국민국가 영역성을 내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국가의 영역성을 내파하고 있는 이주민(:디아스포라)은 국민국가체제의 전형적인 타자로서 줄곧 배제와 포섭의 대상이었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이들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한 것은,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여 이들이

당면한 사회·정치적 문제가 쉽게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함께 근대성이 가진 배타성에 대한 안티 테제로서의 이들 디아스포라의 혼종적·유동적 삶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평가와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민 수의 증대와 디아스포라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들 이주민이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었다. 탈영역적·유동적인 현상이 난무하는 현실 상황을 국가 중심의 영역적 사고로는 더 이상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유동성이 증대하는 현실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고나 인식의 유동화 또한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국가적인 이주민의 증대와 이들의 탈영역적인 삶이 반드시 국민국가 영역성의 약화라는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탈영역적 상황에 직면한 국민국가는, 경계의 해체가 아니라, 경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재영역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국가 내부에 증대한 이주민들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국민국가는 국경을 벗어나 외국에 살고 있는 자들을 재외국민이나 확장된 민족주의로 계속 포섭 하려는 ‘재영역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민국가 내부에서 영역성을 내파하려는 이주민들의 실천이 주로 일상의 로컬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와 경합하는 국가공간은 이들을 동화·포섭해 나감과 동시에 국경을 벗어나 살고 있는 자국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국민국가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정치를 매개로 국민국가의 배타적 영역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편, 국민국가는 국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이나 동포들이 가진 모국(homeland)과의 연계를 근거로 이들을 확장된 새로운 경계로 묶어낸다. 글로벌한 화상(華商) 및 한상(韓商) 네트워크 등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국민국가는 부나 국익추구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활동하고 있는 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특권화하여 새롭게 묶어낸다. 앤더슨(B. Anderson)이 ‘원격지 내셔널리즘(long distance nationalism)’으로 잘 표현했듯이,¹⁵⁾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실천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이 이주한 결과로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넘어 국경이 이동한 결과로도 해석·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앙(I. Ang)은 화교에 관해 “디아스포라는 글로벌한 언설은 세계 각지의 화교와 그 커뮤니티를 화인(비화인과 구별되는)으로 동질화하여, 이를 초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는 수법이며, 나아가 그러한 욕망을 자극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⁶⁾

15) Benedict Anderson, “Exodus”, *Critical Inquiry* vol 20, no.1, 1994, pp.314~327.

16) Ien Ang, ‘Together-in-Difference: Beyond Diaspora, into Hybridity’, *Asian Studies Review*

2. 시티즌십의 중층·다원화

앞서 살펴보았던 스케일의 중층화와 관련지어, 이주민이 야기하는 ‘경계의 재구성’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시티즌십(citizenship)’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적(nationality)으로 불리기도 하는 시티즌십은 국민국가라는 동질적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말하며, 국가는 선별적으로 이를 부여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내적 동질성과 대외적 배타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점에서 보면, 시티즌십이야말로 근대 국민국가가 가진 배타적 영역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 까닭에 그동안 시티즌십은 국적과 긴밀히 결부되어 존재했다. 즉, 국적을 가진 자만이 시티즌십이라는 그에 수반되는 권리를 가지는, 마셜(T. H. Marshall)이 말하는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정치적 권리(potitical rights) 그리고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의 총체로서의 ‘완전한 시티즌십(full citizenship)’의 형태로 주로 존재했던 것이다.¹⁷⁾

그런데 이주민의 증가와 그들의 삶의 방식 변화는 이러한 ‘완전한 시티즌십(full citizenship)’에 균열을 가하여 이의 해체를 촉진했다. 초국가적 이주자들 가운데는 장기간 실질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거주에 기반 한 사회적 권리를 가지면서도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 시민적 권리나 정치적 권리가 제약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의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정치적 권리를 가지면서도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여전히 국적과 다른 민족성(:에스닉 아이덴티티)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더 이상 동일 국가에 거주하는 자들이 동일한 국적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국적을 가진다고 해서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괴리는, 공간 스케일의 중층화에 조응하는 형태로, 시티즌십의 분화로 이어졌다. 옹(A. Ong)이 ‘유연한 시티즌십(flexible citizenship)’으로 잘 설명한 바가 있듯이,¹⁸⁾ 출신지와 거주지 등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걸친 삶을 살아가는 이주자들은 기존의 배타적인 ‘완전한 시티즌십’이 아닌 다원적·개방적인 시티즌십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적과 거의 동일시되던 시티즌십은 이제 로컬-내셔널-리저널-글로벌로 이어지는 중층적 공간층위에 조응하여 로컬시티즌십-시티즌십-글로벌시티즌십 등으로 분화·중층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초국가적 이주자의 증대가 두드러진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시티즌십을 재구성하는 방

vol.27, no.2, 2003, p.144.

17) T. H. Marshall & T. Bottmore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Pluto Press, 1992.

18) A. Ong,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9.

식은 이의 문화·중층화를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알다시피, 유럽연합 27개 가입국가의 모든 시민은 초국가적인 통합체인 유럽연합의 시민으로서 유럽연합의회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등 이를바 ‘연합 시티즌십(Union Citizenship)’을 가진다.¹⁹⁾ 이는 국가공간을 넘어서는 리저널(regional) 공간층위에 기반 한 새로운 시티즌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유럽연합 내의 어느 로컬에서든 살 수 있고, 그 곳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로컬의회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처럼 초국가적인 이주자들의 일상적 활동과 실천은 기존의 국가중심의 ‘완전한 시티즌십’을 상대화시켜, 초국가적 스케일에서의 ‘연합 시티즌십’과 하위국가적 스케일에서의 ‘로컬 시티즌십’ 등으로 문화·중층화를 가져왔다. 물론, 유럽연합이라는 통합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에 한해 유럽연합의회나 역내 로컬에서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시티즌십과 ‘국적’이 완전히 결별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완전한 시티즌십’이라는 개념이, 벤하비브(S. Benhabib)의 표현처럼, ‘분해(Disaggregation)’되면서,²⁰⁾ 이제 시티즌십은 다원적 시티즌십, 초국가적 시티즌십, 로컬 시티즌십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간층위에 따라 문화·중층화된 시티즌십들 간의 관계이다. 즉, 시티즌십의 초국가적 시티즌십, 로컬 시티즌십, 다원적 시티즌십 등으로의 문화는 단순한 기능상의 문화가 아닌, 각각의 공간층위가 가진 특성이나 가치에 기반 한 새로운 권리의 창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로컬 시티즌십은 실질적인 거주(삶)의 공간이라는 로컬공간의 특성에 주목하여 ‘주민권’이라는 거주에 따른 권리를 새롭게 창출한다. 유럽연합이 정주외국인에 한해 국적의 변경 없이도, 국정에 관한 정치적 권리를 제외한, 일정한 사회적 및 시민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일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한 결정에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즉 ‘주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기인한다.

로컬 시티즌십은 특정 로컬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정주’의 여부이다. 즉, 국민인가 외국인인가가 아니라 일시적 거주자인가 정주자인가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정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로컬공간에서는 해당 국가의 국민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주민이기 때문이다. 일시적 거주자를 제외하는 것은 로컬 시티즌십이 일상적 거주를 근거로 삼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마르(T. Hammar)는

19) S. Benhabib, “Citizens, Residents, and Aliens in a Changing World: Political Membership in the Global Era” *Social research* vol.66, no.3, Graduate Facult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1999, p.717.

20) S. Benhabib, “Disaggregation of Citizenship Rights”, *Parallax* vol.11, no.1, 2005, p.13.

국적은 없지만 거주국가의 국민과 거의 다를 바 없이 로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주외국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중세시기 지위개념이었던 ‘데니즌(deniz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²¹⁾ 군주의 칙령에 의해 영국 신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을 가리키는 데니즌이라는 용어를 정주외국인을 새로운 권리의 주체로 삼기위해 다시 소환한 것이다. 정주외국인이 당면한 권리의 부재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데니즌으로서의 권리인 이른바 ‘데니즌십(denizenship)’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셔널 시티즌십이 국민국가라는 완결된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다면, 로컬 시티즌십 또한, 단지 국가의 하위 지부(branch)로서가 아니라, 거주공간인 로컬을 하나의 완결된 공동체 단위로 삼아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로컬 공간이 내셔널 공간이나 글로벌 공간과 함께 중층·경합적으로 존재하는 독자적인 정치공간으로 등장하면서 시티즌십 또한 각 공간층위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재구성되게 된다. 즉, 글로벌 시티즌십이 보편적 인권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한다면, 로컬 시티즌십은 거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참여와 자율의 시티즌십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퍼셀(M. purcell)은 이를 시티즌십의 '재규모화(re-scaling)', '재영역화(re-territorialization)' 그리고 '재지향화(re-orientation)'이라는 개념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²²⁾

IV. 원리의 재구성

1. 위계적 구조(structure)에서 수평적 네트워크(network)로

생활권을 크게 넘어서는 확장된 스케일의 국민국가는 영역성을 기반으로 한 ‘상상의(: 추상적인) 공동체’였다.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공동체의 기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동성’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성의 관점에서 보면, 전근대적 공동체에서는 생활권을 단위로 하여 구성원들의 ‘공동활동’을 통해 공동성이 주로 수행되었다면, 확장된 스케일의 국가공간을 단위로 삼아 성립한 근대적 공동체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일률적인 이른바 ‘시스템(system)’에 의해 공동성이 주로 수행된다. 즉, 국민국가가 영역성을 바탕으로 한 동질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언어·문화·역사 인식 등을 가지며, 동

21) T. Hammar, “State, Nation and Dual Citizenship,” in W. R. Brubaker(ed.), *Immigration and the Politic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9, p.84.

22) M. Purcell, "Excavating lefeuvre: the right to the city and its urban politics of the inhabitant" *Geojournal* vol. 58, 2002, pp.571-576.

일한 ‘대표’와 ‘법률’에 의해 지배되는 ‘시스템’에 의해 공동성을 수행했던 것이다.

국가공간의 구성 및 운영원리가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그 근간으로 삼게 된 것은, 그것이 광대한 스케일의 공간을 동질적·일률적인 정치공동체로 형성·유지해 가는데 매우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국민국가라는 동질적 정치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영역 내에 있으면서도 언어·문화·역사 등에서 차이를 지닌 다양한 로컬들은 중앙에서 정한 하나의 기준, 즉 표준어·전통문화·국사 등에 맞추어 포섭되거나 배제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중앙)와 로컬(:지방)의 관계는 위계적으로 구조화되게 되었다. 로컬(:지방)은 국가(:중앙)가 정한 일률적인 원칙이 관철되는 하위기관이나 지부로 자리매김 된 것이었다.

하지만, 글로컬화의 진전에 의해 로컬(:도시)이 ‘국가 속의 로컬’에서 벗어나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로 새롭게 자리매김 됨에 따라 국민국가의 내부적 운영원리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국가와 로컬의 위계적 관계는 수평적으로, 그리고 중앙집권적이고 일원적인 ‘구조’는 분권적이고 다원적인 ‘네트워크’로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네트워크’로의 변화는 근대성에서 탈근대성으로 전환되는 거대한 흐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알다시피, 근대성은 이분법적 중심주의를 그 근간으로 삼고 있었고, 이는 시간/공간, 이성/감성, 중앙/주변, 구조/관계, 남성/여성 등의 형태로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다음 전자가 후자의 우위에 있다는 인식, 즉 이성중심주의, 시간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구조중심주의, 중앙중심주의의 사고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가진 배타적·억압적·불평등적 속성으로 인한 폐해가 점차 도드라지면서 이에 대한 광범위한 성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공간적 전환’, ‘감성적 전환’, ‘관계적 전환’ 등의 이른바 탈근대적 전환(turn)이 분출하였는바, ‘구조’에서 ‘네트워크’로의 변화는 이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경제적 구조주의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비판하면서, 각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를 맺고, 이러한 관계가 다시 행위자들의 인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rn)’을 주창하는 논의들은 구조에서 네트워크로의 변화 양상을 잘 포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각 행위자 또는 로컬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교차하는 ‘관계’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위계적인 구조에 근거해 형성된 권력관계 또는 원리의 재구성이 불가피하게 된다. 즉, 위계, 구조, 동질성, 질서 등의 메타포로 설명되던 근대적 권력관계 또는 원리가 수평, 네트워크, 다양성, 복잡성 등의 탈근대적 메타포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상호 수평적으로 연결된 노드(node)의 집합일 뿐으로 여기에는 기존의 위계적 구

조에서와 같은 하나의 중심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의 이러한 탈중심성은 참여의 기회 확대로 이어지며, 네트워크가 가진 이러한 속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권력관계 또는 원리는 재구성된다.

구조에서 네트워크로의 급속한 전환을 이끈 것은 가상공간을 통한 네트워크의 무한한 확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화 된 컴퓨터와 모바일 전화는 모빌리티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꾸며 네트워크가 가진 잠재력을 일깨웠다. 카스텔(M. Castells)에 따르면, 극소전자혁명 이전까지 네트워크는 위계적 구조보다 열등한 조직 원리였다.²³⁾ 네트워크는 원리상으로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있으며 자기 조직적이라는 특성을 가졌지만, 공동체의 규모가 일정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와 함께 모바일 전화를 통한 공간적 확장성까지 갖추면서 네트워크는 새로운 조직 원리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상호 연결된 노드의 집합인 네트워크는 동일한 프로토콜 혹은 코드를 공유하는 한 가상공간을 통해 무한히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만 개가 넘는 근거리 통신망을 하루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이용하면서 가상공간이라는 글로벌 스케일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다. 네트워크는 가상공간을 통해 실재공간을 넘어 무제한으로 확장되지만 실재공간과 완전히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상공간은 실재공간의 물질성 위에 공기처럼 떠 있는 형태로, 접근지점, 연결기기의 물리적 특성 등과 같은 현실 로컬의 공간적 고정성에 의존하고 있다.²⁴⁾ 모바일 전화에서 흔히 하는 첫마디가 “거기 어디야?”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공간을 통한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그것이 토대를 두고 있는 로컬공간의 의미 또한 커진다. 이 같은 특정 로컬을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과의 연결을 파슬러(M. Faßler)는 ‘사이버 로컬리즘’이라 칭하고 있다.²⁵⁾ 이러한 가상공간은 국민국가의 영역성, 즉 국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권력의 형식을 바꿔 놓는다. 이제 권력의 토대는 영토적 공간자산이 아니라 로컬을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에서의 협력행위가 될지도 모른다.

2.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영역성을 기반으로 한 근대 국민국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간접민주주의의 방식인 대의민주주의를 정치제도의 근간으로 삼았다. 인민주권의

23) M.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lden MA: Blackwell, 1996, p.36.

24) 도린 매시 지음,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옮김, 『공간을 위하여』, 서울: 심산, 2016, p.189.

25) 외르크 뢰링·트리스탄 텔만 엮음, 이기숙 옮김, 『공간적 전회』, 서울: 심산, 2015, p.216.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바람직함에도 국민국가가 대의제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베버(M. Weber) 등에 의해 스케일이나 운영방식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²⁶⁾ 국가공간은 너무 광대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대의민주주의의 성립 과정에 주목해 보면, 여기에는 근대적 사유체계를 관통하는 계몽적 정치인식(:원리)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매한 주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계몽된 소수가 전문가로서의 정치가가 되어 다수에 대해 책무를 다하는 것이 최선의 정치제도라고 보았던 것이다.²⁷⁾ 이러한 근대적 정치인식에 따르면, 정치는 계몽된 소수가 이성을 바탕으로 인민들을 계몽하면서 사회를 관리해가는 이른바 ‘통치(government)’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 된다.

대의민주주의는 19세기 말을 넘어서면서 민주주의의 현대적 형태인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으로 이어진다. 즉, 민주주의는 정치를 행하는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그들의 권력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참여는 대의정부 구성을 위한 메커니즘, 즉 선거에서의 투표 참여로 국한되었다. 그러던 것이, 보통선거 실시를 요구하면서 정치참여가 분출하던 20세기 초를 지나, 20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정치는 나와 직접 상관없다는 인식, 즉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줄어들면서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투표율)마저 줄어드는 이른바 ‘탈정치화’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민주주의는 ‘정당성’과 ‘기능’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참여의 부재이고, 참여의 부재를 초래한 것은 정치를, 나와는 직접 상관없는, 전문가가 행하는 통치행위로 여기는 인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의 원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적 민주주의의 형태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즉, 참여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결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등 대안적 민주주의를 위한 논의들은 말 그대로 각기 대의민주주의가 드러낸 한계, 즉 참여와 연대의 부재, 불균등, 형식적 절차주의에서 그 대안의 단초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대안적 민주주의를 위한 논의들은 스케일과 원리의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와 구별된다. 즉, 스케일에 있어서는 로컬공간에 주목하고, 원리에 있어서는 ‘통치’를 대신하여 ‘협치(governance)’를 강조한다. 협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집행을 전문가, 즉 정치가나

26) 브라이언 터너 지음, 최우영 옮김, 『막스베버: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역사사회학』, 서울: 백산서당, 2005, p.308.

27) 홍태영,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2002, p.186.

관료에게 맡기지 않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행하는 정치원리이다. 협치는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간 스케일과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정치공동체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참여를 통한 정치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²⁸⁾ 스케일이 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의 범위를 넘게 되어 대의원을 선출하는 순간, 그들은 풀뿌리와 분리된 대표자들로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스케일의 관점에서만 로컬공간이 주된 협치의 장(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의제’의 측면에서도 로컬공간은 협치가 용이하다. 국가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로서의 정치’가 다루는 이슈들은 흔히 자신과 무관한 전문적 영역의 일들로 여겨지기 쉽지만, 로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육아, 교육, 돌봄, 여가 등 생활정치의 이슈들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협치는 국가공간의 ‘영역성’에 기반 한 통치와 대비되는 ‘탈영역’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협치는 한편으로 국경을 획 단하는 글로벌공간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하위에 있지만 국가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로컬공간을 그 주된 장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다.

생활공간인 로컬이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정치의 이슈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정치는 ‘근접성’과 ‘당사자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삼는다. 먼저, 가상공간에서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네트워크의 확산은 생활정치가 그 토대로 삼고 있는 근접성을 확장·재구성한다. 즉, 이전의 근접성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그 토대를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로 그 토대가 확장된다. 네트워크가 위계적 구조에 비해 더 민주적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 중요한 근접성을 확장하여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정치는 주민들이 가진 당사자성에도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로컬공간에는 일상을 매개로 구성된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 즉 지역자치회, 육아공동체, 학부모회(PTA) 등과 같은 자율조직(association)들이 중중적으로 존재한다. 이들 자율조직들은 국가공간이 가진 속성, 즉 이성, 추상성, 대체가능성, 등가성, 타율성 등에 대비되는 감성, 대면성, 대체불가능성, 비대칭성, 자율성 등의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언제든지 대체가능한 소모성 부품으로 전락하기 쉬운 현대사회의 상황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활정치의 대체불가능성(uniqueness)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주된 동인이 되고 있다.

28) 뾰루뚜알레그리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5만 명 이하의 주민이 사는 지역의 참여율이 5만 명에서 15만 명의 주민이 사는 지역보다 4배 더 높게 나타난다(마리옹 그레·이브 생또메 지음, 김택현 옮김, 『뾰루뚜알레그리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 서울: 박종철출판사, 2005, p.128).

즉, 자신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는 기꺼이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이들 참여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협치’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협치는, 통치의 ‘전문가주의’와 대비되는 ‘당사자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당사자주의란 국민주권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말한다. 즉,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이를 행할지 등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리’인 것이다. 특히, 당사자주의는,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혜대상’ 또는 최종사용자로만 여겨졌던 주민(:당사자)들이 이제는 의사결정 또는 제공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사자주의의 근거는 주권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이며, 이는 누구에게도 양도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정치 원리이다.

공간정치의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가 정치공간의 탈근대적 재구성, 즉 다층적 스케일에 맞춰 확장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원리가 ‘보충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이다. 이는 근접한 생활공간 단위에서의 의사결정을 중시하여,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작은 공간스케일에서 이루어지고, 생활공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가 힘든 범위의 문제들은 보다 넓은 공간스케일에서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생활공간인 로컬에서부터 내셔널, 리저널, 글로벌 스케일까지 확장되는 중층적 공간구성에 있어 확장된 공간으로 갈수록 작은 공간스케일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가공간 중심의 위계적 구조는 국가 스케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모든 하위공간에 적용되는, 이른바 Top-Down방식이었다면, 보충성의 원리는 이와 대비되는 Bottom-Up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충성의 원리가 생활공간에서의 의사결정을 절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앤도(遠藤乾)의 말처럼, 보충성의 원리의 핵심은 어느 단위에도 절대화되지 않고 각 공간 스케일이 그 존재사유를 완수하면서 역할을 분담한다는 문제구성에 있다.²⁹⁾ 이런 점에서 보충성의 원리는 근접성의 원칙 및 당사자주의와 맥락이 달아 있다.

29) 遠藤乾, “日本における補完性原理の可能性”, 山口二郎・遠藤乾 外編, 『グローバル化時代の地方ガバナンス』, 東京: 岩波書店, 2003, p.262.

V. 마치면서

이상에서, 공간정치의 관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탈근대적 변화, 즉 대안적 정치공간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근대적 정치공간의 표상인 국민국가가 영역성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흔히 글로컬화로 대변되는 탈근대적 공간변용은 영역성의 해체 또는 재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영역성의 재구성을 통해 대안적 정치공간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국민국가의 영역성은 이전의 정치공동체와 비교할 때, 스케일, 경계, 원리의 측면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보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변화와 재구성의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케일의 재구성에 있어서는, 국민국가라는 추상적이고 광대한 스케일의 베타적 정치공간 중심의 공간구성이 글로컬화의 진전에 따라 로컬-내셔널-리저널-글로벌 스케일의 공간들로 중층·다원화되는 양상의 원인과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이처럼 중층·다원화하는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각 공간층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분담할지가 중요하며, 각 공간층위들의 관계에 주목하는 ‘스케일의 정치’가 필요함을 논구하였다. 그리고 글로벌한 유동의 공간과 로컬한 장소의 공간과의 대비를 통해 새로운 대안적 공간구성에 있어 로컬공간이 가진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경계의 재구성에 관해서는, 국민국가는 베타적 경계를 통해 영역성을 유지해왔으나 모빌리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물자·서비스·정보의 이동이 급증하면서 경계의 속성 변화와 해체 및 재구성이 진행됨을 고찰하였다. 현실적으로 경계의 해체 및 재구성을 이끈 실천적 존재로서 이주민에 주목하였으며, 이들의 초국가적인 삶을 통해 경계의 재구성, 즉 국민국가의 탈영역화와 재영역화의 양상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티즌십을 통해 이주민이 야기하는 경계의 재구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스케일의 관점에서의 공간구성의 중층·다원화와 조응하는 방식으로 시티즌십 또한 로컬시티즌십-시티즌십-글로벌시티즌십의 형태로 분해되고 있음을 유럽연합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원리의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기준의 국민국가 공간이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그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대안적 공간구성은 수평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변화함을 살펴보았으며, 네트워크는 관계성과 탈중심성의 속성을 가지기에 이것이 확산되면 이에 부합하는 형태로 권력관계나 원리도 재구성됨을 논구하였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근대적 정치가 전문성을 가진 대표에 의한 ‘통치’ 행위로 인식되었

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른바 대안적 민주주의의 논의에서는 통치를 대신하여 ‘협치’가 강조됨을 논구하였다. 협치는, 공간스케일의 관점에서는, 생활공간인 로컬공간과 친화적이며, 생활정치가 중요하게 여기는 ‘근접성’과 ‘당사자주의’ 그리고 당사자주의가 공간을 확장하는 방식인 ‘보충성의 원리’를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논구하였다.

참고문헌

- 데이비드 헨드·엔소니 맥그루·데이비드 골드브라트 지음, 조효제 옮김, 『전지구적 변화(원저명: *Global Transformations*)』, 서울: 창비, 2002.
- 도린 매시 지음,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옮김, 『공간을 위하여(원저명: *For Space*)』, 서울: 심산, 2016.
- 마르쿠스 슈뢰르 지음,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원저명: *Räum, Orte, Grenzen: Auf dem Weg zu einer Soziologie des Raums*)』, 서울: 에코리브르, 2010.
- 마리옹 그레·이브 생또메 지음, 김택현 옮김, 『뽀루뚜알레그리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 서울: 박종철 출판사, 2005.
- 브라이언 터너 지음, 최우영 옮김, 『막스베버: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역사사회학』, 서울: 백산서당, 2005.
- 외르크 뢰링·트리스탄 틸만 엮음, 이기숙 옮김, 『공간적 전회(원저명: *Spatial Turn*)』, 서울: 심산, 2015.
- 존 어리 지음, 윤여일 옮김,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원저명: *Sociology beyond Societies: Mobilit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서울: 후마니스트, 2012.
- 팀 크레스웰 지음, 심승희 옮김, 『장소(원저명: *Place: A Short Introduction*)』,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 홍태영,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2002.
- 遠藤乾, “日本における補完性原理の可能性”, 山口二郎・遠藤乾 外編, 『グローバル化時代の地方ガバナンス』, 東京: 岩波書店, 2003.
- Anderson, B., “Exodus”, *Critical Inquiry* vol.20, no.1, 1994, pp.314~327.
- Ang, I., ‘Together-in-Difference: Beyond Diaspora, into Hybridity’, *Asian Studies Review* vol.27, no.2, 2003, pp.141–154.
- Benhabib, S., “Citizens, Residents, and Aliens in a Changing World: Political Membership in the Global Era” *Social research* vol.66, no.3, Graduate Facult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1999, pp.709–744.
- _____, “Disaggregation of Citizenship Rights”, *Parallax* vol.11, no.1, 2005. pp.10–18.
- Castells, M., *The Power of Identity*, Malden MA: Blackwell, 1997.
- _____,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lden MA: Blackwell, 1996.
- Giddens, A., *Konsequenzen der Modern*, frankfurt: M, 1995.
- Hammar, T., “State, Nation and Dual Citizenship,” in W. R. Brubaker(ed.), *Immigration and the Politic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9. pp. 83–95.

- Harvey, D.,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 of Cultural Change*, Cambridge MA: Blackwell, 1989.
- _____, *Justice, Nature & the Geography of Difference*,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1996.
- Marshall, T. H., & T. Bottmore, T.,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Pluto Press, 1992.
- Ong, A.,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9.
- Purcell, M., "Excavating lefebre: the right to the city and its urban politics of the inhabitant" *Geojournal* vol.58, 2002, pp.99–108.
- Sack, R. D.,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Sassen, S., *The Global City*, New Y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Smith, N., "Scale", Ronald J. Johnston, Derek Gregory, Geraldine Pratt & michchael Watts(eds.)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4th Edition*, Massachusetts: Blackwell, 2000.
- Taylor, P. J., "A Materialist framework for political geography",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 vol.7, No.1, 1982, pp.15–34.
- Urry, J., *Global Complexity*, Malden Mass.: Polity Press, 2003.

【Abstract】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 Alternative Political Space : Focusing on the Reconstruction of Scale, Boundaries, and Principles

Lee, Sangbong

Modernity, institutionalized by taking the nation-state as its unit based on territoriality, has spread globally under the banner of rationalism and human progress. However, as it entered its later stages, it revealed side effects and limitations such as depersonalization, instrumentalization, and powerization, unlike the original plan, and based on reflection on this, various post-modern alternatives are being sough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nation-state, a representative symbol of modernity, is based on territoriality. It seeks to understand the recent post-modern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spatial politics, namely, the weakening and restructuring of the nation-state's territoriality. Based on this, it examines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lternative” political space being propo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odernity. Specifically, this study characterizes the territoriality of the nation-state along three aspects: scale, boundaries, and principles, and analyzes how these characteristics are being transformed or reconstructed. Furthermore, through this analysis, it aims to consider the aspects and meaning of alternative political spaces. Since the “spatial turn” in the 1900s, so-called spatial discourse has been booming in fields such as geography and sociology, but there has been insufficient interest in it in the field of political science, which primarily studies ‘political’ phenomena. Therefore, this article also aims to encourage greater interest in space in the field of political science.

Key Words : Nation-state, Spatial politics, Territoriality, Scale, Alternatives

• 논문투고일 : 2025년 10월 30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5년 11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11월 20일

